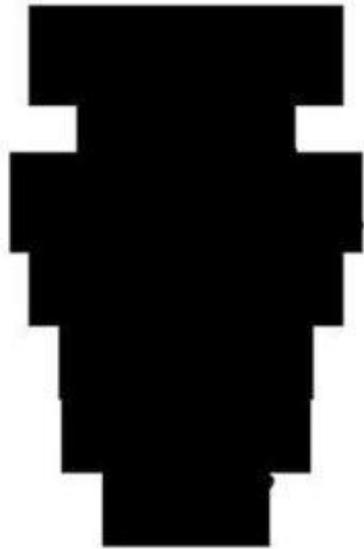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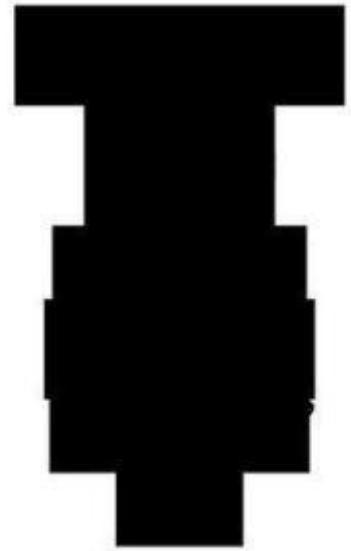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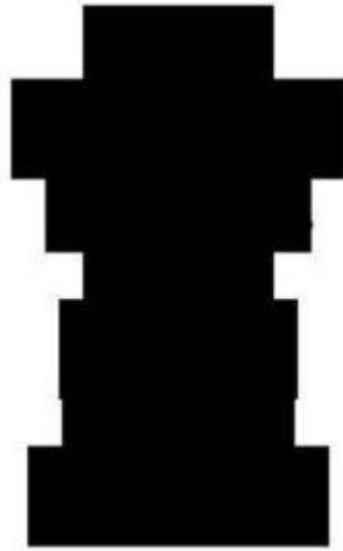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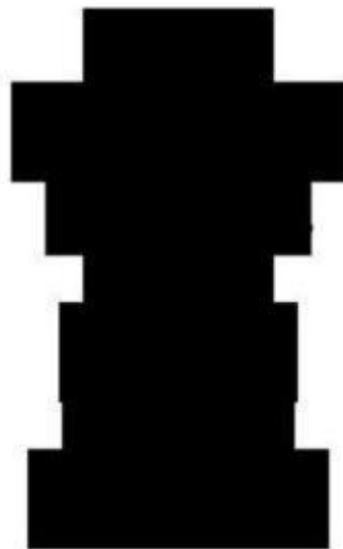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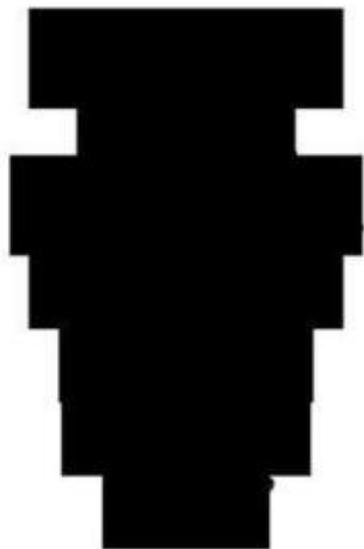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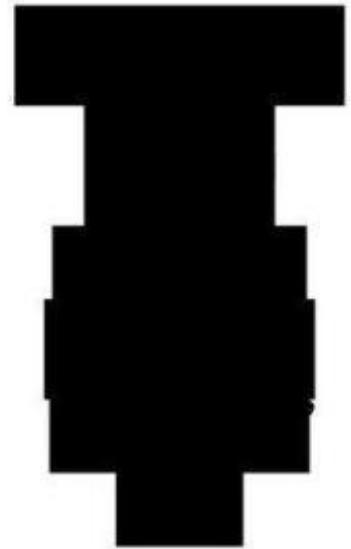


블랙리스트
그 이후,
“문재인정부,
블랙리스트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



아르코
예술가의 집
다목적실,
2020년
2월 11일
(화요일)
오후 1-4시



‘블랙리스트
책임자
송수근
계원예대
총장 퇴진
공동행동’
주최

■ 여는 말

정윤희 /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블랙위원회 위원장, 미술작가

블랙리스트가 밝혀진지 2년이 지나자 정부는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의 성과를 언급했다.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예술인들에게 소송을 거는 일이 하나둘씩 늘어났다. 반성은커녕 자숙의 시간도 거치지 않은 이들은 '언제까지 내가 반성해야 하나'며 예술현장과 교육계로 복귀하기 시작했다.

작년 여름 블랙리스트 책임자 송수근 전차관이 예술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개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블랙리스트의 토대가 되는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을 작성하고 예술가를 향해 사찰, 검열, 배제, 차별을 위한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자이다. 그런 그가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를 받은 후 얼마지 않아 예술가를 성장시키는 교육기관의 최고 권한자가 되었다.

2018년 4월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 당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제 권력형적폐청산*의 성과를 냈으니 생활형적폐청산*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결국 우리사회의 적폐가 존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며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었다. 얼마 전 열렸던 대법원의 김기춘 조운선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파기환송은 블랙리스트의 위법을 축소시키는 결과임을 봤을 때 과연 정부가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블랙리스트 책임자 송수근 계원예술대 총장 퇴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¹⁾ 주최로 열리는 오늘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1번 국정과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행을 검토·진단한다. 그리고 미진한 적폐청산이 국민을 향한 2차가해로 증폭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배경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 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적 대 토론회를 열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안으로 위에 '블랙리스트 책임자 송수근 계원예술대 총장 취임' 사태를 통해 사학 비리, 교육부의 출세우기식 대학평가 등의 교육 병폐문제와 대학 내 관료주의가 일상적인 적폐로 작동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블랙리스트 책임자 송수근 계원예술대 총장 퇴진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청년세대는 블랙리스트 책임자가 반성 없이 교육자로 복귀하면서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저항의 주체로서,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로 블랙리스트를 비롯하여 적폐청산에 무기력한 우리사회에 일침을 가하며 우리사회가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블랙리스트 문제는 우리사회 전반의 문제이지만 블랙리스트 문제를 문화예술계로 국한 시키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바이다. 블랙리스트 문제는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다.

1) 공동행동은 블랙리스트 책임자 송수근 계원예술대 총장퇴진을 촉구하는 연대로 「계원예대 블랙리스트 총장 퇴진을 위한 교수모임」「계원예대 블랙리스트 총장 퇴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문화연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예술대학생네트워크」가 함께하고 있다. 문화 예술 및 교육, 시민사회 단체 58개와 544명의 지지를 받아 2020년 1월 28일(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했다.

■ 발 제

01 블랙리스트 적폐 청산 어디까지 왔나

이양구 /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전문위원

02 적폐의 일상화 -교육계 관료주의의 작동방식

성기완 / 계원예대 블랙리스트 총장퇴진과 학교정상화를 위한 교수모임

발제 01 블랙리스트 적폐 청산 어디까지 왔나

이양구 /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전문위원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의 일환이었다. 구체적인 ‘과제목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관계 파악, 재발 방지 및 문화행정체계 혁신’이었고, 2017년부터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 백서 발간,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추진하는 것이었다.¹⁾

민관협의체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훈령으로 설치되어 2017년 7월 31일 ~ 2018년 6월 30일 동안 조사 활동을 한 후 문체부에 책임규명 및 제도개선 권고를 한 후 해산하였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에 따라 문체부는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이행협치추진단을 2018년 8월부터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미진한 진상 조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문체부 훈령에 따라 설치된 관계로 수사권을 갖지 못하였다. 문체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자발적 서류 제출과 관계자 진술에 의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던 관계로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등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문체부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당사자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사 기간이 11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사례는 물론,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사하지 못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 예술국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담당했던 직원으로부터 예술국 이외에도 문정국, 문화기반국, 미디어국, 관광국, 체육국 등 각 해당 과에서 사무관이나 주무관들이 국정원에 (블랙리스트 여부) 검토를 요구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국정원이나 청와대 쪽으로 국정원 관련 창구가 오○○ 사무관으로 단일화되었다는 진술이 나오게 된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²⁾

미진한 진상조사의 문제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2018년 12월 31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종합보고 및 대국민 사과’ 자리에서 향후 국회 차원에서 추가 진상 조사를 위한 입법 노력이 있을 시 문체부 차원에서 적극 협조를 구두 약속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애초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서 정무수석실 주도로 2014. 4. 4. ~ 5월 말 운영된 <민간단체보조금 TF>에서는 교문수석실 이외에도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8개 부처가 참여하였고 그 결과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다.³⁾ 사실상 민간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블랙리스트 검증과 실행이 특검 수사와 기소를 거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문제로 축소되고 그마저도 예술국 산하 한국문화

1)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4쪽.

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진상조사및제도개선위원회 백서』 4권. 293쪽.

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2017고합10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판결』, 76쪽.

예술위원회, 미디어국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국 산하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문제로 축소되었던 것이다. 애초에 특검 수사는 김기춘 등 피고인 7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등을 입증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블랙리스트 사태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감사원의 문체부 기관운영감사(‘17. 6.)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을 몇 개 더 추가하였을 뿐 이렇다 할 추가 진상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감사원이 2017. 1. ~ 3. 감사를 실시한 후 문체부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감사원이야 말로 감사 대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감사원은 문체부 국장급 1명에 대해서만 중징계인 정직을 요구하고, 실·국장급 6명을 포함한 18명은 경징계 하라고 했던 것이다.⁴⁾

불공평한 블랙리스트 실행 책임의 부담

사정이 이렇다 보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책임규명 권고 과정에서 부조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시기 블랙리스트 실행을 하였던 사람들 중에서는 집중적인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련 진술이 확보되었는데도 조사 기간 문제로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책임을 피해간 사례가 다수 존재하게 되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권고(‘18. 6. 27.)한 책임규명 권고 대상자는 모두 131명(중복 2명)이었다. 이에 대하여 문체부는 문체부 검토 대상 68명(수사의뢰 권고 24명, 징계 권고 44명)에 대한 이행계획을 2018년 9월 13일 발표한 바 있다. 그 내용은 ①수사의뢰 권고자 24명 중 출판계가 이미 고발한 1인 외 4인 등 문체부 소속 공무원 5명과 전직 공공기관장 2명 등 모두 7명에 대한 수사의뢰, ② 징계 권고 대상자인 문체부 직원 중 과장급 이상 22명 중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기처분(주의 4명), 퇴직(5명), 징계시효 경과 등의 사유(13명) 등을 제외하여 징계가 가능한 자 13명 중 10명에 대하여 ‘주의’ 처분을 하고 수사의뢰 권고자 중 2명도 ‘주의’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었다.⁵⁾

문화예술계는 이러한 문체부의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징계 0명’의 셀프 면책으로 규정짓고 긴급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거리 행진 등을 진행하며 반발을 이어갔다. 결국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검토회의’를 구성하여 재검토 절차를 거쳐 수사의뢰 3명 추가, 중징계 1명, 수사의뢰자 3명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시 중징계, 사무관급 이상 전원(17명)에 대한 엄중주의 조치 등이었다.⁶⁾ 대부분의 블랙리스트 실행이 2015년 11월 이전에 이루어졌고 징계시효가 3년이었던 탓에 2018년 12월 31일 시점에서 징계가 가능한 문체부 공무원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징계가 가능한 블랙리스트 관련자 16명에 대하여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처분 5명 등을 하였고, 영화진흥위원회는 징계가 가능한 10명에 대하여 해임 1명, 정직 1명, 감봉 5명, 견책 3명 등의 처분을 하였다.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에 전화 등으로 배제 지시를 하였던 과장, 사무관, 주무관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책임규명 이행은 한 마디로 말해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산하 공공기관에 강요하였듯 그 책임 또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4) 민중의 소리, 「‘블랙리스트 예술인’ “감사원 감사결과 규탄... 민간 참여 진상위 만들어야”」. 2017. 6. 20.

5) 문체부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68명에 대한 이행 계획 발표」. 2018. 9. 13.

6) 문체부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이행방안 최종 확정」. 2018. 12. 31.

7) 뉴스1, 「예술위, 블랙리스트 관련자 16명 징계... “예술인들께 사과”」. 2018. 11. 21.

8) 뉴스1,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자 징계 처분 완료」. 2018. 12. 28.

결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⁹⁾

재발 방지 제도 개선 및 후속 조치

한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은 기관별로 이행 중에 있다. 그 중 주요한 사항을 정리해 본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는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은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되어 있으나 20대 국회 마감을 앞두고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하기 위한 노력은 우선 기관의 성격을 준정부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고시 변경하는 정도까지 진행되었다. 향후 두 기관은 법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국정홍보 기능 혁신 및 조직 분리, 국가예술위원회 설치 등 문체부 조직 구조 혁신 과제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율운영협약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알고 있다.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는 문체부 장관 사과가 수차례('18. 5., '18. 12., '19. 12.) 있었지만 대통령 차원의 직접적인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이 2018. 1. 7. 영화배우 김규리 등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과 오찬 후 영화 <1987>을 관람하거나¹⁰⁾, 2020년 1월 8일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서 블랙리스트 같은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을 뿐이다.¹¹⁾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은 기관 별로 강사 초청 형태로 진행되었고, 현재는 재발방지 교육을 위한 책자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팝업씨어터 사태에 대한 공개 사과('19. 7. 문예위원장 공개사과, '19. 12. 문체부 장관 공개 사과) 및 후속 조치 논의 진행을 사례로 하여 서울프린지 사태에 대한 해결 과정의 초기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 보상은 국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일이어서 민사소송 이외에 따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지역 피해예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배상 판결('19. 1. 24.)이 있는 후 정부는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상고심을 통해 법적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즉각 항고하였다.¹²⁾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은 작품 제작비 지원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논의 자체를 기피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이 계원에 술대학교 총장, 자치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저서 발간, 표창 및 훈장 수여, 승진 등 블랙리스트 사태를 축소, 왜곡,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남에 따라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0년 1월 30일 있었던 대법원 판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공공기관 직원들이 문체부의 부당한 명단 송부 및 심사 진행 상황 보고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버렸다. 강신하 변호사가 지적하였듯, 지원배제를 위한 일련의 행위는 상호 연결되어 있어 별개로 구별할 수 없는데도 명단송부와 심의과정의 보고 행위 등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 블랙리스트 범죄를 재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¹³⁾ 기관 개선 권고 중에서 가장 활발

9) 책임규명 이행 최종 내역은 위 보도자료 붙임 문서인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 현황」 참고. 징계 재검토 과정을 통하여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문체부 공무원 1인을 중징계 의뢰하기는 하였다.

10) 한국국정일보, 「문재인 대통령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과 영화 「1987」 관람 및 오찬」, 2018. 1. 8. 연극분야의 경우 인격이 짓밟힌 피해자 대신 배제 횡수가 많은 연출가가 오찬에 초청되어 연출가 스스로도 나중에 그런 자리인 줄 모르고 갔다며 미안해하는 일도 있었다. 블랙리스트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1) 세계일보, 「문대통령 “블랙리스트 다시는 없게”」, 2020. 1. 8.

12) 뉴스1, 「문체부 “충북 블랙리스트 예술인, 국가배상책임 당연히 인정”」, 2019. 2. 13.

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분야는 아마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선임 절차 개선 과제일 것이다. 이행협치추진단의 권고에 따라서 7기 위원회 최종 후보자 2인에 대한 사전 공개가 이루어지고 총16명의 후보자 중 여성 후보가 0명인 것이 계기가 되어 예술계의 반발로 위원 선 임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게 된 것이다.¹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권고 사항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백서』 3권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¹⁵⁾

블랙리스트 청산의 주체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가, 문체부가, 공공기관이 블랙리스트 청산을 하지 않았다고 욕을 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일선 지원사업 심사 현장에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것은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였다. 연극 분야 블랙리스트 실행에 연루된 어느 예술위원의 말을 들어보자. “블랙리스트를 다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막아내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예술위원에서 중도 사퇴하고자 했지만, 연극 분야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이 가장 극심한 상황에서 자신이라도 남아서 블랙리스트를 최대한 막아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9사람들이) 말려서 사퇴 의사를 철회했던 것이고, 그때는 박근혜 정부나 보수 정권이 계속해서 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국정농단 사태로 보수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라도 남아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최대한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¹⁶⁾ 담당 직원이 블랙리스트 실행자를 부탁하였다는 심사위원의 입장은 또 어떤가. “(예술위 직원에게) 배제 협조 부탁을 받은 일이 없으며 심의는 공정하게 진행하였다.”¹⁷⁾ 게다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사무처(국)장 자리는 대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개방직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명단을 거론하지는 않겠으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은 공직자들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함께 행한 일이었다. 개방직으로 갔던 사람들은 퇴직 후 문화예술계 인사로 돌아오고, 공직에서 퇴임한 공직자는 다시 문화예술계 인사가 되거나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 혹은 자문위원 등의 형태로 공직으로 돌아간다. 블랙리스트 사태를 가해 공직자와 피해 예술인의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한 블랙리스트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송수근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취임 이후 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공직자들에 대한 불철저한 처벌,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묵인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거칠게 말해서 블랙리스트 청산은 기관과 예술 현장 양측을 전장으로 하여 벌여지는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 지 공직자와 문화예술계의 싸움이 아니다.

13) 뉴스1, 「예술인들 ‘블랙리스트 대법원판결’에 반발.. 집단행동 나섰다」, 2020. 2. 5.

14) 중앙일보, 「‘여성 0명’ 문화예술위원 다시 뽑는다」, 2019. 11. 28.

15) 백서는 [www. blacklist-free.kr] 자료실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다. 제도개선 권고 부분은 3권 68쪽 이하에서 볼 수 있다.

1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4권. 286쪽.

17) 같은 쪽.

<참고>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현황」

붙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현황**

진상조사위 권고 내역				해당기관 이행 내역
구분	기관		인원	
수사 의뢰 권고 (26명)	중앙 부처 (15명)	문화체육관광부	12명	수사의뢰 7명(감사원 징계 3명, 주의 1명 중복), 주의조치 2명 퇴직 해당기관 검토 중
		외교부	1명	
		국가정보원	2명	
	공공 기관 (11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명	수사의뢰 2명(퇴직 3명 중)
		영화진흥위원회	3명	수사의뢰 1명(퇴직 2명 중)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명	퇴직 2명
		한국문학번역원	1명	퇴직
		예술경영지원센터	1명	퇴직
국립극단	1명	퇴직		
처분 소계			26명	수사의뢰 10명, 주의조치 2명
징계 권고 (105명)	중앙 부처 (46명)	문화체육관광부	44명	중징계 1명 주의조치 31명 (감사원 주의 4명 포함) 민간임용 퇴직자 민간임용 퇴직자
		외교부	1명	
		대통령비서실	1명	
	지자체 (3명)	대구광역시	3명	주의 3명
	공공 기관 (56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3명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주의 3명, 징계시효 경과 3명 주의, 퇴직 4명, 민간위원 2명
		영화진흥위원회	14명	해임 1명, 정직 1명, 감봉 5명, 견책 3명, 퇴직 4명
		예술경영지원센터	4명	주의 2명, 퇴직 2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명	사실관계 불명확 2명 민간위원 1명, 퇴직 1명
		국립극단	3명	경고 1명, 퇴직 2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명	징계시효 경과 1명, 하위직급 1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명	퇴직 1명, 징계사유 없음 1명
		한국영상자료원	2명	퇴직 2명
		한국문학번역원	1명	퇴직 1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명	경고 1명
처분 소계			105명	중징계 1명, 해임 1명, 정직 5명, 감봉 8명, 견책 7명, 경고 2명, 주의 42명 (감사원 주의 4명 포함)

발제 02 적폐의 일상화 - 교육계 관료주의의 작동 방식

성기완 / 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과 조교수

“지금 바로 제 곁에 계신 판사님이 방청객 중의 누군가에게 비밀 신호를 보내시는군요. 당신들 중에는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받는 사람이 있는 거 같아요. 그 신호가 무슨 뜻인지는 내가 알 길이 없죠. 야유를 보내라는 건지 박수를 치라는 건지...”

카프카, <소송>, 3부

1. 평범한 예술가에서 피해자로

나는 평범한 예술가다. 3호선버터플라이라는 밴드를 했고 몇 권의 시집을 냈다. 실험적인 작업들을 좀 해왔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싶긴 하지만, 단 한 번도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은 없다. 또한 나는 특별히 이념지향적인 작업을 한 일이 거의 없다. 몇 번의 세월호 추모 공연에 참여했고, 한 두 번, 정치적 지향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동료 예술가들과 함께 한 적이 있다. 그 뿐이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의외라고 생각했고, 사실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얼마 후, 유관기관의 J 모라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해 오면서 나의 생각은 바뀌었다. J도 잘 알고 나도 잘 아는 후배 시인이 내게 직접 전화를 해서 J의 고백을 전해주었다. J가 그 때 그 일,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했다. 후배 시인은 차마 내게 직접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는 J를 신해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때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이하여 대규모 문화행사가 기획되던 때였다. J는 나에게 한-프랑스 젊은 예술가들의 교류축제를 기획해 달라고 의뢰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 만든 기획서를 J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지금 확인해 보니 2014년 3월 17일의 일이다. J는 기획서 잘 받았다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회의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후로 연락이 오지 않았다. 시간이 걸리나보다, 했다. 문화계의 일들은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얼마 후 우연히 기사를 보니 한-프랑스 교류 문화행사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었다. 나의 기획이 물건너 간 것을 요즘 자주 나오는 말처럼 ‘기사를 보고’ 알았다. 나는 J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다. 연락해서 화를 내볼까 싶기도 했으나 그냥 그 정도 였다. 연락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내 불찰이 클 것이다, 내 기획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다. 실은 무명의 예술가들은 정부 단체에 지원서를 제출하면서도 설마 되겠어, 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런 체념 없이 정부 기관을 상대하다가는 다친다. 그 때도 나는 그냥 자조적으로, 그럼 그렇지 뭐...이렇게 짐짓 얼버무리고 말았다. 자존심이 조금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지만 애써 외면하려고 노력 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합류하지 않았다. 새로운 작업으로 보여주는 것이 블랙리스트 따위로 무명 예술가의 앞길을 막는 제도와 체제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평범한 예술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은밀하게 불이익을 받은 예술가로 재분류되었지만 아직도 내가 어느 대목에서 얼마나 불이익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카프카의 <소송>에 나오는 요제프 K가 이유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피고인이 되는 것처럼, 블랙리스트의 작동방식은 은밀하고 불명확하며 억압과 배제의 주체가 숨어있다.

2. 평범한 공무원에서 가해자로

송수근 계원예술학교 총장은 공무원이었다. 그는 언뜻 보기에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평범한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 공무원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국가공무원 법 제57조). 그러나 동시에 공무원은 국민,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한다(제 59조). 송수근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는 상사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복종했다. 그러나 그 일은 국민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공무원 법조항에 어긋난다. 공무원법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이 일은 '의무에 없는 일'이 된다. 상사가 이렇게 위법한 일을 시켰을 때 평범한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유진룡 장관이 퇴임하고 김종덕 장관이 부임한 직후인 2014년 10월 4일 문체부 실장급 공무원 3명이 사직했다. 그들이 사직하기 전에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에 한 세평이 작성되었다. "작성된 문건이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등에게 보고 된 후 직후인 10. 4.경 문체부 3명의 실장은 청와의 지시를 받은 김희범 차관에게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백서 324쪽)

다른 한 부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또는 다른 이유로(출세 또는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 등) 상사의 위법한 지시를 수행한다. 송수근은 그 부류에 속한다. 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총괄하는 TF 팀을 이끌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당시 기초실장이었던 송수근은 건전콘텐츠활성화 TF를 이끌며 블랙리스트 작성의 실무를 총괄했다. 계속 인용되고 있는 백서에 송OO 로 표기된 것만 35개의 쪽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로 봉준호라는 이름이 백서에 등장하는 페이지는 12개 쪽에 달한다. 아예 백서의 한 챕터가 문체부 내 건전 콘텐츠활성화TF 등의 구성 및 운영 사건(356-417쪽)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적극적인 협조를 한 공무원이 송수근이다. 그는 거의 주연급 조연이라 할 수 있다. 송수근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임명된다. 온 나라가 촛불의 염원으로 뜨겁게 타오를 때 그는 박근혜 정부의 패잔병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는 평범한 공무원에서 평범한 공무원 부역자로 변신했고 그 과정에서 장관 직무대행이라는 지위까지 오르게 된 것이다. 그가 하는 수 없이 이 모든 일들을 떠맡았다고 변명할 수는 있지만 팩트는 팩트다.

3. 면직부 - 블랙리스트 가해자에서 법적 처벌과 징계 없이 퇴임한 공직자로

송수근이 공직을 떠난 이후 2년 만에 재기하여 계원예술학교 총장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법적인 조치를 피했기 때문이다. 하나는 검찰에서 그를 기소하지 않았고 따라서 재판 자체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어떤 형벌도 받지 않았다. 이 대목은 후일 자세히 조사해봐야 할 부분인데, 명백히 위법한 일을 수행한 고위 공무원이 어떻게 기소조차 되지 않고 전혀 재판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점은 큰 의문으로 남는다. 배우자가 검찰 고위직에 있었던 점, 당시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수사협조에 의한 특별대우, 또는 촛불 이후 집권층과의 모종의 정치적인 고려나 거래 등이 있었을 가능성 등이 뇌리를 스치지만 이와 관련된 진실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 하나 송수근은 감사원의 문체부 기관감사에 따르면 그의 위법한 업무 수행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송수근은 2014년 10월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의 지시를 받은 장관으로부터 문체부 지원사업 중 정치적인 작품 등에 국고가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 후 응 방안을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송수근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 황성운에게 문화체육비서관실 지시내용을 잘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

록 지시한 후 문화예술, 콘텐츠, 미디어 등 3개 분야별 정치편향 작품을 지원 배제하기 위한 세부 대응전략이 기술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143) 을 참고하여 황성운이 작성·정리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하 “문화예술계 지원방안”이라 한다) 보고서를 장관에게 보고하였고 장관은 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다.”

(감사원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 감사 중에서)

이 정도의 언급이라면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송수근은 징계를 면했다. 이 대목도 관료주의의 작동방식과 관련하여 향후 자세히 연구되어야 할 대목이다. 이처럼 법적 처벌과 공무원법 상의 징계를 면한 송수근은 도덕적인 잣대로야 도저히 용납될 수 없지만 법적으로는 예술학교의 총장이 될 수 있는 법적 면죄부를 받은 결과가 됐다.

4. 변신 - 예술가 검열자에서 예술 총장으로

2019년 4월 8일자로 계원예술학교의 제 8대 총장이었던 권영걸 총장의 직을 면한다는 공문이 교직원 전체 이메일로 전해졌다. 권 총장의 사임은 속사정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견된 것이었을 수도 있지만 정보가 부족한 보통의 교수, 학생들에게는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한 달 전인 3월 11일자로 총장실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온 공모 정보’를 관련 교직원에게 공유한 것만 봐도 권영걸 총장의 사임은 예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갑자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 2018년 ~ 2019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동안 계원예술학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학제 4.0 위원회’가 총장 주도로 출범하여 심도 있는 공동연구를 한 끝에 상당히 혁신적인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 안은 전체교수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져 통과되었다. 권 총장이 퇴임하기 직전인 2019년 3월 25일의 전체교수회의에도 학제 4.0 위원회의 학제개편 보고가 있었다. 이로써 계원의 변화가 예견되던 와중이었다. 그러나 권영걸 총장은 노조의 반대, 이사장과의 갈등설 등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중도 퇴임했다. 어쨌든 권영걸 전 총장이 학교 법인과 갈등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로 보인다.

이후 새로운 총장의 임명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다. 계원예술학교 교수협의회는 총장선출방식의 민주화를 요구했고 학교법인 계원학원 재단은 일견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재단의 전횡을 막을 방법이 없는 ‘총장추천위원회’ 관련 교칙을 제시하였다. 2019년 6월 10일,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허울뿐이고 비민주적인 총장 선출 규정안의 문제점”을 고발하면서 “학내 3주체인 학생, 교수, 교직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이사회에서 직권으로 총장을 임명해온 권위주의적 관행이 존재 한다.” 는 문제의식 아래 “이사회에서 논의한 총장 선출 규정안은 학내 구성원의 참여가 배제된 상황에서 마련된 독단적이고 비민주적 규정안으로 원천 무효이므로 즉시 폐기”할 것과 “학내 구성원의 참여 하에 올바른 규정안 제정을 위한 ‘총장 선출 규정안 제정 위원회’를 즉각 설치할 것”을 이사회에 요구했다. 당시 이 와 같은 요구는 철저히 무시당했고 이후 교수협의회는 총추위 참여를 거부했으며 학교법인은 총장선출 과정을 강행했다. 2019년 6월 26일에 5명의 총장후보자 소견발표회가 열렸다. 당시의 상황을 전해주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송수근을 포함해 5명의 후보가 나서 학교 발전 및 학 운영 계획을 밝히는 자리였다. 송 후보자 소견 발표문은 문화부 출신답지 않게 교육부 관료나 쓰던 내부 용어가 많아 어색했다. 교수 참석자가 적었던 객석에서는 폰을 열어 이미 블랙리스트 담당자임을 검색 했던 차라 당연히 탈락을 예상했다고 한다. (이용배(계원예술학교 애니메이션과 교수), [칼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영 실무 책임자가 대학 총장으로 세탁되어 돌아온 사태, 웹진 문화정책 리뷰 (2020.2.3.))

재단 이사장은 교수협의회와의 토론회 자리에서 총장선출과정 이전에 이미 송수근이 블랙리스트 관련자라는 것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했다. 그는 '용인대학교 교수가 되는데 아무 하자가 없었다. 우리 학교 총장이 되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사회가 도덕적인 잣대로 후보들을 판단하는 기구는 아니라는 입장도 표명했다. 어쨌든 학교 법인이 송수근 총장의 블랙리스트 관련 이력과 소문들을 총장 선출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또한 당시 참관했던 모 교수는 5명의 후보 가운데 최하점을 주고 싶었다는 개인의견을 필자에게 전해주기도 했다. 그런데 법인은 왜 송수근을 다섯 명의 후보 가운데 최고라고 생각했을까? 다섯 명의 후보 가운데 이처럼 심각한 결격사유를 지닌 다른 후보가 있었을 까? 내가 알기로는 없었다. 교육부 관련 공직자 출신 후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주도의 커넥션들을 활용하려면 오히려 교육부 출신의 후보가 더 적합했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송수근은 문체부 출신 퇴직 공직자에 블랙리스트와의 연관성이 명백한 후보다. 향후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비판과 부정적 인식들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송수근을 기어코 총장 자리에 앉힌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른 모든 관료주의적 시스템 내부의 결정들처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명백한 사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오랫동안 계원학원의 이사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계원학원의 모기업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는 시가총액 3조 가량의 기업으로, 코스닥 상장 회사 중에서 셀트리온에 이어 2위의 규모다. 매출의 대략 90% 가량이 카지노 사업에서 나오고, 10% 가량이 호텔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파라다이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매우 밀접하게 소통해야만 하는 회사라 할 수 있다

다음은 교육부의 승인 절차다. 교육부도 송수근의 블랙리스트 관련 이력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계원 학원의 임명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송수근 총장의 임명을 승인해 주었다는 사실 뿐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어떤 부서에서 어떤 결정들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공동행동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 단체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송수근 총장의 승인을 철회하라라고 그렇게 여러 번 요구했지만 단 한 번도, 제로 된 답변을 들은 적이 없다. 철회는 고사하고 왜 임명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경위 설명 같은 것도 전혀 없다. 교육부의 총장 승인 절차가 요식행위만은 아니라는 점을 동양학교 최성해 총장의 허위학력 관련 사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교육부는 5개의 학위 중 3개 학위가 가짜인 최 전 총장에 대해 동양 법인 이사회에 면직을 요구할 예정임을 밝혔다.(오마이뉴스, 2019. 12. 19일자 기사). 그렇다면 교육부도 중립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정권의 정치적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매우 신속하고 엄격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송수근 총장 건은 계속되는 답변 회피, 미루기, 묵묵부답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5. 구조조정, CQI, 계원의 미래

필자는 지금까지 송수근 총장이 취임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그의 예술학교에 관한 비전이나 예술교육 에 대한 나름의 소신, 신념 등을 제대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문체부에서는 관록을 자랑하는 공직자였겠지만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그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 와중에 학교의 흐름을 주도하는 그룹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3주기 평가를 통과해야만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술학교에 어울리지 않는 '지속적 품질관리(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에 입각한 교육품질 관리의 행정적 절차들을 일괄적으로 도입하여 예술교육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방향을 강요하고 있다. 송수근

정 성향의 예술인에 대한 탄압과 배제 정책이 집성된 악의적 성과다. 송수근은 그 과정에서 관료주의라는 기계가 작동하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한 인물이다.

관료주의의 이와 같은 성과는 자기들의 서클 안에서 공유된다. 실행자들, 관료들은 문체부, 교육계 할 것 없이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더 큰 기계를 통해 더 간접적인 방식으로 시민을 소외시키고 멀쩡한 예술가를 한량으로 전락시킨다. 마찬가지로 예술학의 학생들을 CQI 의 문답 형식에 가두고 그들의 상상력을 박제시킨다. 관료주의의 일부인 법관들은 '의무 없는 일'에 대한 요설적인 해석으로 관료주의의 작동과정에 면죄부를 준다. 스스로도 그 기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순간 자신도 면죄부를 받는다. 그렇게 하여 작동하는 기계는 큰 기업의 이익이나 가치와 은밀하게 맞닿아 있다. 그 기계가 작동하면서 얻어지는 이익들을 위 표의 각 급의 기관과 부서가 나눠 먹는다. 탐관오리는 민중의 피를 빨아서 배를 불린다. 나라 곳간이 가득 차도 민중은 굶는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염원을 안고 탄생한 국민의 정부다. 이 정부가 이러한 관료주의의 흐름들을 방관 하고 그 기계가 자신들에게도 유리하게 작동하리라고 기대하면서 국민들을 소외시킨다면, 존재이유가 흔들리게 된다. 하루 빨리 이런 점을 다시 인식하여 스스로도 국정과제라 칭하는 블랙리스트 사태가 일상적 차원에서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블랙리스트의 부역자들이 보이지 않게 다시 활동하면서 예전의 관료주의적 기득권을 회수해가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 최소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토론

- **검열의 학교, 학교의 검열**

한솔빈 / 계원예대블랙리스트총장비상대책위

- **사립학교 적폐청산을 위한 제언**

고부응 / 전국교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차별범죄를 대하는 민주공화국의 태도**

이동민 /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 **학생-청년이 바라본 블랙리스트와 오늘**

박주현 /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 **블랙리스트, 그 이후를 넘어 현재 바라보기**

김재상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 검열의 학교, 학교의 검열

한솔빈 / 계원예대 블랙리스트 총장 비대위

‘검열의 학교, 학교의 검열 그리고 학습권’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한솔빈입니다. 저는 오늘 학생에 대한 교측의 검열이 어떻게 전개되어가고 있는지, 그에 대한 학생운동의 대처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 간략히 생각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학생운동에 대한 검열의 역사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말 배제학당의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된 협성회는 사회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관지를 발행하였으나 자유민권사상을 고취하고 황실전복을 꾀하였다는 명목으로 대한제국 정부에 의해 탄압 받았고, 20세기 초에는 다양한 사립학교들이 일제가 장악한 공립학교에 맞서 민족적 교육을 관철 시키고자 했으나 일제의 법령과 무력에 의해 분쇄되었습니다.

군사독재의 3공화국(1963-72)-4공화국(1972-81)-5공화국(1981-88), 즉 박정희 체제에서 전두환 체제로 이어지는 시기에는 전경이 전국의 대학교에 상주하며 모든 학생운동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이 전 과정에서 학교 당국이 검열의 하수인이자 주체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음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이처럼 학생에 대한 검열의 역사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고 나타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학생운동에 대한 검열은 언제나 사회 제 단위들에 대한 검열 및 탄압과 동시에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협성회의 검열은 당대의 공화주의자들에 대한 탄압과 함께 이뤄졌고, 일제하 사립학교에 대한 검열은 급진적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탄압과 함께 이뤄졌으며, 박정희-전두환 체제에서 학생운동에 대한 검열은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탄압과 함께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계원예대의 경우 검열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사회 제 부문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블랙리스트 총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는 데에 공모한 인물을 대학의 총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사태를 공론화하고 송수근을 사퇴시키고자 실천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당국은 동아리실에서 비대위의 회의가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아리실 이용을 제한하거나, 비대위의 대자보를 훼손하고 임의로 제거하거나, 개인적으로 형사고발을 예고하는 등 주도면밀한 검열과 탄압을 자행해왔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징계를 암시하는 경고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비대위가 주관한 집회에 대해 책임을 묻는 학교 당국의 제스처이며, 2019년 3차 학생위원회(학생처장, 교수, 총학)의 결의에 따라 비대위가 수신한 것으로, 그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학교 기물을 훼손하거나, 학과 업무에 훼방을 놓거나, 학생 간행물을 무단 발간-배포하거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학내 질서를 문란케 한다면 학생상벌에 의한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칙을 엄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 학생운동에 대한 검열이 공공연하고 무자비하게 이뤄졌다면, 이제 검열의 작동은 보다 교묘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국은 '불법집회를 조직한 불순세력'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하지 않는, '정당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호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회변혁운동 부문, 특히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검열 기제와 매우 유사합니다. 두산중공업은 '불법파업'이라는 명목 하에 2002년 6-7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65억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노조법은 정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원의 해석은 그것이 다른 주체(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정당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뒤이어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가 주관한 '불법파견노동자 정규직화 요구 파업'은 사측으로부터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마치 계원예대 당국이 집회를 조직한 비대위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정당한 집회'를 요구한 것처럼 말입니다. 학생의 무기로서의 집회와, 노조의 무기로서의 파업은 모두 (아마도 재산권에 가까울)권리라는 이름으로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사성에 주목할 때야 말로 검열이라는 주제는 자유주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검열에 있어 사회의 변혁운동과 학생운동이 동일한 실체에 놓여있음을 볼 때 비로소 검열에 대한 투쟁을 더 큰 단위들과의 연대 속에서 전개시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야말로 검열에 대한 투쟁은 사회 제 부문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학습권을 요구하는 학내 주체라는 방식으로, 즉 블랙리스트 공모자가 주도하는 대학 체제를 거부할 '권리의 주체로서 학생'이라는 주체를 설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습권으로부터 출발한 운동은, 이내 다른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검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리의 주체가 아닌, 변혁의 주체로서 다시금 학생을 사고할 필요를 느낍니다. 협소한 '대학사회'의 단위가 아니라, 변혁의 단위로서의 학생 말입니다. 이로부터 출발할 때, 우리의 활동은 학습권 침해에 맞서는 당사자의 요구가 아니라, 대학의 민주적 작동을 요구하는 변혁의 요구가 될 것입니다.

• 사립학교 적폐청산을 위한 제언

- 블랙리스트 범죄자, 공공의 적 리스트로 잡아주자 -

고부응 / 전국교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중앙대학교 교수

1. 우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자 송수근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블랙리스트 책임자 계원에대 총장 퇴진을 위한 공동행동'의 활동가 분들에게 뜨거운 지지를 보냅니다. 조금 더 멀리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발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최근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내린 김기춘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권력자들의 '직권남용' 유죄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하는 이상한 판단을 했지만 블랙리스트 작성은 범죄입니다. 노동자나 노동운동가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을 방해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형벌을 받습니다. 하물며 개인이나 사업자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도 처벌을 받는 범죄인데 국가 기구를 활용하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 리스트에 근거하여 정부 예산을 사적 목적으로 썼던 박근혜 정부의 조운선, 송수근 등 권력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범죄자들이 이 사회를 운영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3.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책임이 있는 송수근 같은 자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사실상 범죄자입니다. 이런 자가 대표하는 대학은 범죄자로 대표되는 대학입니다. 수치를 안다면 계원예술대 구성원, 이 사회의 예술인, 이 사회의 교육인, 사실상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든지 이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4. 블랙리스트 책임자 송수근 문제로 계원예술대에서 불거져 나왔지만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선 관료의 범죄에 대한 정치권력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송수근의 경우는 정부의 고위 관료를 필요로 하는 계원예술대의 운영자(법인이 되겠지요) 그리고 퇴직 후의 특권적 자리를 찾는 고위 관료와의 유착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원대의 내부 사정을 제가 잘 모르지만 바람직한 대학 운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2005년에 계원예술대의 전 이사장이 교비를 횡령하여 빌라 두 채를 매입하는 등의 비리가 드러났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진행한 교육부는 이런 사실을 알리기는 하였지만 학장 등에 대해서 경징계 조치를 취한 계원예술대의 입장을 용인하였습니다. 이사장이 처벌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 하수인만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계원예술대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교육부의 조치가 고맙겠지요. 뭔가 보답을 해야겠지요. 관료들로서는 뭔가 베풀어 둔 것이 있으면 돌아올 것이 있다고 기대하겠지요. 이런 'give and take' '짬짜미'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관계가 관료와 사학 법인의 관계입니다. 2005년에 드러난 계원예술대의 비리와 비슷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비리나 유착 관계의 결과물이 송수근의 계원예술대 총장 선임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그 부부가 아닌 우리들-계원예술대의 학생들, 교수들, 직원들, 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모

든 그저 그런 보통 사람들-은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는 고위 관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던 정치인이나 전문 지식인들도 그 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낙하산으로 좋은 자리에 내려앉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관계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정치권력은 그들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료들을 동원하여야 하지만 관료들의 기득권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수행하려 합니다. 결국 정치권력과 관료들의 관계 역시 째짜미 관계임이 확인 되는 것입니다.

5. 이렇게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이 누이와 매부의 관계를 맺어 자기들끼리 다 처먹는 구조를 바꾸려면 우리는 그들 일부-검찰이나 사법부, 정부 기관, 또는 정치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적어도 그들의 일부는 정의를 실현하는 흥내는 내니까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들의 째짜미가 범죄라는 것을,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서로 서로 그런 범죄 행위를 알리면서 그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힘을 모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 우리가 도둑으로부터, 강도로부터, 사기꾼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누가 도둑인지, 강도인지, 사기꾼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범죄자 목록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여 이들이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기 당하지 않도록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전과자 목록은 사실 조무래기 도둑들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범죄자 목록은 검찰과 경찰과 권력과 자본의 비호를 받고 있는 우리 모두의 아주 큰 적, 즉 공공의 적입니다.

그들이 만든 블랙리스트가 몰래 숨겨두고 자기들끼리만 보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공공성, 정부 예산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리스트라면 제가 만들자고 하는 공공의 적 리스트는 우리 사회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 우리를 지켜내기 위한 리스트입니다. 도둑놈이 누군지 어떻게 도둑질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도둑질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우리 사회는 이런 공공의 적 리스트를 만든 적이 사실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친일인명사전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공공의 적 리스트에 해당합니다. 물론 친일인명사전의 현재성이 있지요.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있으니깐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공공의 적 리스트는 바로 지금도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범죄자 리스트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나 연구소에나 비치되어 있을법한 친일인명사전과는 달리 (30만원인 이 책은 너무 비쌉니다) 누구나 원할 때 공짜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공의 적 리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같이 관심 있는 누구나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8. 이런 공공의 적 리스트의 작성과 활용을, 제가 대학에서 선생 노릇을 하고 있기에, 대학을 예로 들어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9. 대학 동네에서 손꼽을 수 있는 공공의 적은 아마 강원도 원주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만든 상지대학교(설립자라고 알려진 원흥목의 묘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이 대학은 이 지역 유지들이 대학설립기성회를 조직하여 설립한 대학입니다. 상지대의 설립과정은 한국의 일반적인 공

립학교의 설립과정과 비슷하다)를 개인 재산으로 바꾸어 버렸던 김문기, 학생들의 등록금을 모으고 돌리면서 순식간에 여러 대학을 세워갔던 이홍하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 지금 현재 대학에서 퇴출되었기에 쉽게 대학 동네의 범죄자임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또는 모르는, 대학의 범죄자들은 쌓이고 쌓여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비리 대학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던 대학은 그 한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대학을 이용하여 개인 재산을 축적하여 가는 범죄자가 운영하는 대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원대가 그렇고 세종대가 그렇고 제가 재직하는 중앙대가 그렇습니다. 대학비리와는 거리가 멀 것 같은 경희대만 하더라도 확인하여 보면 도둑질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원래 독립운동을 위해 세운 신흥무관학교인데 학교 운영이 어려울 때 관선이사로 들어왔던 조○○이(누군지 아시지요?) 먹어버린 것이지요. 김문기와 비슷합니다.

저는 한국의 모든 사립대학은 범죄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근본적으로 모두를 위한 조직인데, 즉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데, 사립대학은 대학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삼는 대학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비리라고 일컬어지는 대학 사업자들의 범죄를 기록하고 이를 공유하게 되면 대학 범죄자들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체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들은 범죄 행위를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대학은 특정 개인들이 돈을 버는 사업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범죄 목록 작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보강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범죄 행위가 우리를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대학이든, 정부든, 환경이든, 그 무엇이든 공공성의 이름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거의 잊고 삽니다. 일상적으로 공공성이 확인될 때 우리 사회는 좀 살만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공공의 적 리스트는 다른 말로 하면 공공의 적 백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과 자본에 의해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와 범죄자 보고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10. 대학의 예를 들었지만 이런 공공의 적 리스트는 당연히 다른 분야에도 해당됩니다. 이견희, 이재용 등의 기업 범죄, 김관진 등의 국방 범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유아 교육 범죄, 쌍용자동차의 노동 범죄 등 등 이 사회에서 범죄로 규정하여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할 범죄는 넘치고 넘칩니다. 이런 범죄는 이런 범죄자를 옹호하는 현재 상태의 국가 체제에 해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감시하여야 할 범죄입니다.

11. 공공의 적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의 범죄자와 범죄 유형을 우리 모두가 숙지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런 범죄의 피해를 막을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지요.

• 차별범죄를 대하는 민주공화국의 태도

이동민 /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본 원고는 <블랙리스트방지법제연구 2018.1>, <헌법재판소 판례>, <문화비전2030>에서 상당 부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

“블랙리스트 그 이후,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 대중과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키워드는 대략 다음과 같다.

- 1) ‘지난 정부에서 발생하였다’
- 2) ‘지원사업에서의 배제’
- 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반면 우리 문화예술계가 문화적 제노사이드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요구하는 바람직한 후속은 다음과 같다.

▷블랙리스트로 드러난 일련의 사유화된 국가문화정책이 가지는 정치적(폭력적) 속성에 대한 규명과 성찰, ▷이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우리의 공공 행정 영역에 터 잡게 되었는지를 밝혀내는 것, ▷그리고 국가범죄를 정당화하고 정례화하게 만든 반민주적 의식과 법리의 왜곡 양태들을 철저히 밝혀내고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

현재 우리사회는 여전히 블랙리스트 사태의 위법성 여하를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분석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라는 한정된 정부부처 내에서 제발방지와 치유를 위한 장치들을 논의하는 중이다. 더불어 국가범죄/차별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하는 명문화된 공적 처벌과 국가적 대응이 부재한 상황이다.

적폐청산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주권자 시민으로부터 행정권력을 부여받은 문재인 정부가 인식하는 블랙리스트 사태는 무엇인가? 그리고 국정농단의 치욕의 시간을 겪은 국정운영 작동기구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고 3년이 지난 2020년 현재까지, 국가운영의 핵심 대의 민주주의 기구인 사법/행정/입법부에서는 인권의 바탕을 해한 차별범죄이자 민주주의 질서를 붕괴시킨 반헌법적 국가범죄라기 보다는, 여전히 한정된 영역에서 일어난 행정상의 직권남용으로 보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빙산의 일각처럼 깊고 두텁게 쌓여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인식 중 지극히 일부분이 살짝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발생과 그 후속에 대한 미흡한 대응 또한 이런 작용의 하나일 것이다. 공화국의 민주적 작동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입법/사법/행정 그 어디에서도 공식적인 사과와 자발적 성찰의 실천을 보여주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실행 책임이 있는 전.현직 관료들의 2차 가해 등, 우리가 받

달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민주주의'라는 가치 표제를 달 만큼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태이다.

“다시 정리해보는 블랙리스트 사태”

부정한 국가폭력으로 민주공화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정상적 극단을 달린 정권이 민주시민의 손으로 철퇴를 맞고 퇴진 당했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그간 정부의 대응 행보를 보면, 언제든지 다시 작동할 수 있는 위험한 회로를 꺼안고 있는 상황에 무관심한 듯하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권력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헌법을 부정하고 사회변화를 향한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는 일련의 점진적 쿠데타의 한 전술로 이용된 것이 그 본질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성격규정과 그에 상응하는 단호한 응징 및 교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입헌적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움직여나가는 소중한 헌법적 관행을 구성해 낼 수 있게 된다.

블랙리스트는 정권의 차원에서 국민의 인식과 가치관을 조작하고자 했다. 체제 순응적, 체제 지향적 가치관이나 인식방식들에 대한 국민의 접촉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의식 내지는 판단력 자체를 변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 요컨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그 자체 대국민 심리전의 주요한 전술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전의 방식을 통해 지난 정권은 적폐와 국정농단의 극단으로 까지 치달을 수 있었고, 결국에는 점진적 쿠데타로 지칭되는 최악의 반동정치에 이르게 되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치적으로 볼 때, 현행 헌법의 근간을 부정하며 우리의 헌정질서를 무력하게 만드는 반체제적, 반헌법적 국사범(國事犯)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실제 이 블랙리스트 사태는 입헌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민주공화국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동시에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태는 문화·예술인들은 물론 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그 모든 관련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와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자체를 침해한다.

블랙리스트는 정치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이 시민사회에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문화를 강요하고 그에 반하는 가치관·세계관들이 시민들에게 표현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개인의 자율적 이성과 다원적 세계관의 형성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그러한 획일성으로 인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민주적 기본질서가 형성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존재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더구나 일정한 문화영역을 시민사회로부터 의도적이고 작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정치원리조차도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 결국 블랙리스트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들만이 통용되고 정권의 의지나 지향에 반하는 정치적 견해들은 인위적으로 도태시킴으로써 우리 헌법의 핵으로 규정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태가 된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에서는 표현에 대한 검열제도와 허가제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검열이나 허가 등의 사전억제는 “표현물이 외부로 표현되기 전에, 즉 사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표현될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을 선별한 뒤 표현될 수 없는 표현물의 표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1. 8. 30. 2000헌가9, 판례집 13-2, 134(148-149))

우리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매체 중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전통적 의미의 언론·출판뿐 아니라, 그것을 단순히 외부로 드러내어 정보(즉, 사상 또는 의견)를 전달 또는 전파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헌법재판소 2005. 2. 24. 2002헌마289.)

동시에 문화·예술인들이 그 공동체 내에서 혹은 그 공동체를 벗어나 일반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그들이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포섭될 가능성을 침탈하는 한편, 그 인격의 발현 수단을 제거한 것이 된다. 사전억제가 헌법상 금지되는 이유 중 하나는 검열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단일화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의견의 단일화” 또는 이견의 봉쇄는 민주주의의 부정을 의미한다. 블랙리스트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핵심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주국가의 본질에 반한다.

블랙리스트는 문화국가원리의 본질적 요소인 문화의 자율성을 그 핵심에서부터 부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구성되어야 할 영역을 국가의 한 하위 개념으로 전락시키는 전체주의적 혹은 국가주의적 왜곡현상을 발생시킨다. 더불어 이러한 행태는 문화를 정치에 종속시키면서 문화민주주의를 본질에서부터 부정하는 우를 범할 뿐 아니라, 문화의 주체를 시민·대중으로부터 통치권력으로 이전시켜 버림으로써 문화 그 자체를 말살시킨다.

“문재인 정부의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은 어디까지 와있는가?”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상기의 민주공화국의 존립 근거를 형성하는 모든 요소를 부정하였다. 부정한 공권력과 국가폭력으로 차별과 배제를 통해 주권자 시민의 기본권을 묵살했으며, 검열과 통제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이념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으며,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여 법치의 틀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문화는 삶의 총체적 방식이며 동시에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회적 실천이다. 문화는 대중이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삶에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이며 나아가 그러한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고 향유하는 생활방식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문화는 시민으로서 대중이 향유하는 기본적 인권의 집합적 실천태가 되며, 기본적 인권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국가 의무를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된다.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전복한 것이 바로 블랙리스트 사태이다.

“문화를 ‘지적·상상적 산물’로만 여기는 것은 문화를 주로 고도의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만 보는 것이다. 문화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이 긴밀하게 연결된 ‘삶의 전체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레이몬드 윌리엄스 Raymond Williams)

블랙리스트 사태를 일상 속 문화적 제노사이드라고 일컫는 이유이다.

문재인 정부의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은 어디까지 와있는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는 문화예술표현 또는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모든 시민의 사상의 자유와 모든 형식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기에, 인간 존엄과 가치의 문제인 동시에 국가의 존립 의의를 심각하게 해하는 용인할 없는 범죄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와 주권자 시민의 기본권을 조직적으로 짓밟은 국가범죄의 심각성을 입법/사법/행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실행 책임자들의 2차 가해에 대한 어떠한 공적 제재나 통제도 없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공화국의 민낯을 마주하고 있다.

주권자 국민의 복리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와 기관이라는 공공체계가 수동적이고 마치 죽어 있는 듯, 방임하고 조장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일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블랙리스트 사태가 국가범죄이자 차별범죄라는 점을 엄중하게 성찰하고, 이의 제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과 신속한 대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민주’공화국이라는 질서를 직조해내는 국가적 실천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촛불혁명이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자 과제이며, 문재인 정부의 존립 근거이기도 하다.

법/제도 확충과 기관 개혁이라는 국가 행정적/제도적 실천이 한 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너진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바로세우기 위한 국가운영체계 개혁이라는 사회적 담론형성의 한 축으로서의 당연 책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 학생-청년이 바라본 블랙리스트와 오늘

박주현 /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학생과 청년이 바라본 블랙리스트는 어떤 의미와 체감인지, 오늘날의 청년 세대를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응 주체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의와 전략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6-17년도 국정농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수많은 총학생회들은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박근혜 퇴진의 구호를 외쳤고 당시 예술대학생들은 예술대학생 시국회의를 구성했다. 예술대학생 시국회의는 각 학생회들이 주축이 되어 시국선언과 두 차례의 박근혜 퇴진 예술대학생 시국대회를 진행했으나 이제 16년도 대학 입학생들은 20년도 대학 졸업생이 되었고 그 때의 분노는 분노의 기억 정도로 남아 있는 것 같다. 당시 학생들의 분노는 국정농단이란 충격적 이슈와 함께 그 중 하나인 블랙리스트 개별 사건에 대한 분노보다는 국정농단 전반에 대한 분노이지 않았나 싶다. 예술대학생이란 특수한 신분은 예술가라 칭해지지 못하고 예비예술가, 혹은 그저 대학생으로 분류되곤 한다. 당시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가가 아닌 예술대학생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어떤 의의를 가진 국가범죄인지 체감의 정도가 상이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스로에게 예술가란 정체성이 대학생이란 정체성보다 상위에 있다면 예술대학생 시국회의를 이끄는 주체가 되었을 것이고, 예술가보단 대학생이라는 정체성이 상위라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보다는 정유라의 부정입학에 더욱 분노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의 이유로는 예술대학생과 사회의 예술가를 칼로 베듯이 구분하는 현재의 교육과정 이 기인했다 생각한다. 블랙리스트를 통한 예술 검열이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며 '표현의 자유'란 예술가에게 제1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술가의 권리를 교육과정에서부터 배우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매 과제마다 교수의 입맛대로 자신의 작업이 바뀌고,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교수의 취향에 맞춰 과제를 위한 작업을 하는 건 사실상 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에 늘 불만을 느끼면서도 당장의 학점, 취업, 인프라를 위해 침묵하는 이들이 다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계원예대 내 학생들의 투쟁은 더욱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예술대학생이 늘상 말하는 '교수 권력이 너무 견고하다'라는 실체 없는 프레임에서 벗어난 그들의 활동은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진정한 예술가의 길이지 않을까 싶다.

1934세대¹⁾ 청년들은 자신의 의견에 대해 소신표현 경험이 높으나 소신표현의 주된 경험은 국민청원 또는 서명운동 참여(46.1%), SNS 해시태그 운동에 공감표시(42.5%), SNS 익명 고발에 공감표시(30.8%) 순으로 온라인으로 가능한, 소극적 방식의 소신표현 경험이 주를 이루고 있다.²⁾ 또한 주로 생활 습관 변화 및 노력, 제품 서비스 구입 및 사용 등 개인의 삶 내에서 일상적으로 소신을 표현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다양성의 가치가 매우 중요해졌고 그

1) 만 19세~만 34세를 지칭한다.

2) 대학내일20대연구소-2018년 1934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및 가치관 조사

만큼 다양하게 발화되는 이슈들은 각 개인들에게 일상으로, 당사자로 체감될수록 소신 표현과 실천으로 작동되었다. 이는 각 개인의 정체성과 당사자성을 기반 한 개인의 기준, 개인의 소신이 더욱 중요한 활동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으로, 대표적으로는 페미니즘 운동을 말할 수 있다. 대의를 위해, 국가를 위해, 문화예술계를 위해 라는 거대 담론은 더 이상 어찌면 청년들을 묶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연서명을 하고 온라인 상 지지표현을 하는 것, 학생과 청년이 지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은 어찌면 딱 그 정도 수준의 동의를 구한 상태이지 않을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국가범죄이며 예술가들을 탄압한 말도 안되는 사건이다. 블랙리스트 가담자가 예술대학의 총장으로 임명됐다니 이는 분명 잘못된 일이다'라는 의견에 학생과 청년 모두가 쉽게 동의하고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 이를 해결하는 과정의 주체로 참여하고 싶진 않은, 소극적 지지만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장에 나가 대통령을 직접 바꾸었다는 새로운 세대의 성취 경험은 단순히 정권 교체만을 불러온 것이 아니다. 부조리를 보고 침묵이 아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직접 실천하는 정의로운 예민함이 청년 세대에게는 있다. 정권교체, 미투 운동 등 다양한 방식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청년 세대의 움직임을 광장으로, 오늘과 같은 토론의 장으로 확장시킨다면 우리가 꿈꾸는 변화는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대학에서 페미니즘적 이슈와 달리 '개인 일상의 변화'로 체감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던 총장직선제 쟁취 요구안을 위해 3,000명의 숙명여대 학생이 학생총회에 모였고, 거버넌스를 위한 학교-학생 협의체 신설 요구안은 1,150명의 동덕여대 학생이 모여 학생총회를 통해 외쳤다. 이는 그만큼 조직과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가 학생조직과 청년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을까 한다.

송수근 총장 임명 건은 문화예술계에서도, 거버넌스와 대학 민주주의를 논하는 대학 사회에서도 이 시대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제는 총장직선제를 외치던 각 대학의 총학생회들도 이 투쟁에 함께 연대해야 한다. 학생과 교직원에게 총장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이 있었다면 블랙리스트 공모자인 송수근은 결코 총장으로 선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도 많은 사학들이 그러하듯,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대학 법인들은 자신들의 이권만을 위해 총장을 임명하고 있고 파라다이스 재단과 계열 또한 그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렇게 현대 학가 주요 이슈인 총장직선제는 송수근 총장 임명 건으로 인해 더욱 당위성을 얻게 되었다. 총장직선제를 통한 대학 구성원들의 총장 선출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제2, 제3의 송수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적폐청산을 내세운 현 정부와 송수근의 총장 임명을 승인한 교육부의 책임론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송수근이라는 인물로 인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총장직선제 요구안을 엮어 대학 내 운동으로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년 세대를 보면 공정성이나 윤리적 감각이 전혀 없지는 않은 세대들이고, 일상의 부조리를 묵인하지 않는 성향을 보이면서도 정작 커다란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는 왜, 당사자성이 떨어지는 걸까? 이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예술을 검열 받는 것은 나(예술가) 개인의 권리 침해이다.'라는 명제가 청년세대에게 내제화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예술을 검열 받는 것은 부조리한 일이며 이는 각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사고의 흐름에서 당사자성이 없다면 '예술 검열은 부조리한 일이다'로 생각은 멈추고 블랙리스트 운동을 하는 예술가들을 자

신으로부터 타자화 시킨다. 블랙리스트 타자화는 내가 직접 당한 일은 아니니까, 지금 예술을 전공하고 있긴 하지만 예술가가 될 건 아니니까, 표현의 자유가 예술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예술 검열은 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다'로 이어지는 생각의 고리를 만드는 것과 개인의 권리 침해가 예술계에서 자행됐을 때의 의미, 즉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당사자성을 기반 한 학생-청년 세대의 자발적 실천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 블랙리스트, 그 이후를 넘어 현재 바라보기

김재상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이번 토론회가 <블랙리스트 그 이후>를 짚고 <문재인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적폐청산 이행>점검을 묻는 듯 질문을 던지며,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 의지를 되물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일 것이고 두 번째는, 블랙리스트 실행자/책임자들이 새로운 양상으로 문화예술계를 (재)침해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그로 인해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주체들이 등장하였음을 알리는 취지 정도로 정리해본다.

본 토론문은, 위의 세 가지 내용을 통해 블랙리스트의 '현재(성)'를 바라보기 위한 시도이다. 또한 본 토론문의 제기를 참고삼아, 나중 토론에서,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에 대한 '향후 전략과 방향 설정'수립의 유의미한 논의로 이어지길 바란다.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에, 안이한 인식이 가져온 문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내용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 전략1.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 1.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그 과제 목표 중 하나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관계 파악, 재발 방지 및 문화 행정체계 혁신”¹⁾이다.

이처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현 정부의 주요 과제로 설정된 배경에는, 박근혜 정권 당시의 국정농단 세력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직권(권력)남용이라는 중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구조적으로 얘기하자면, 블랙리스트는 청와대의 지시 아래 문체부에서 관리했으며, 예술위 및 영진위 등을 통해 적용되었던 “관료제적 체계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혁신의 필요성을 함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²⁾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과 산하 기관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9월, 문체부에서는 권고안에 비해 크게 미비한 이행 계획을 발표하는 등,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 해결 의지가 의심되는 상태로, 현재까지 미온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윽고 한민호 전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2016.03.~2016.11)이 블랙리스트로 인해 배제 받고 피

1)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00대 국정과제」, 2017.08.

2) (1)2017년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건의 재발을 막고,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_소개 중)”출범. (2)2018년 5월 8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3)2018년 6월 28일,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책임권고안)’ 제출/2018년 6월 30일 해산. (4)제도개선 권고 이행, 책임규명 권고 이행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이행협치추진단’구성 후 현재까지 활동 중. (5)2019년 2월 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발간.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 <http://www.blacklist-free.kr>

해를 본 민간 출판계를 대상으로 고발과 고소를 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³⁾(2019.11. 형사소송 기각,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

또한,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⁴⁾이 2019년 8월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자신이 배제하고 차별했던 문화예술계 현장으로 복귀하였다. 이러한 대표적 사건은 개인 분쟁 문제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를 바라보는 정부 기관의 안이한 인식이 드러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2. <블랙리스트 그 이후>에서 드러나는, 실천적 행동

이처럼 우리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청산되지 않고 산적한 상태에서의 현재를 맞이하고 있다. ‘이후’에 의해 ‘현재’가 소환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과거의 부정적 요소를 깨끗이 씻어 버린 현재로서의 오늘이 아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공론화를 통해 발견되고 실체화된 적폐의 시점(이후)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후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숨 가쁘고 격렬하게, 많은 사람의 분노와 절박함, 희망과 기대, 좌절과 실망을 실어 힘겹게 직조해온 실천적 구성물이고, 그럼으로써 굴절되고 파괴되어버린 공적 공간(public space)을 소생시키려는 노력과 행위의 시간이었으며, 여전히 그러하다.”⁵⁾

이렇듯 ‘이후’의 시간을 가능케 한 최근의 실천으로는, “블랙리스트 책임자 송수근 계원예대 총장 퇴진 공동행동”의 출범이 있다. 공동행동은, 송수근 문체부 전 1차관을 비롯하여 (1)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 가해자가 문화예술계 현장으로 복귀하는 상황을 고발하고, (2) 현재 진행 중인 블랙리스트 사태의 해결과 피해자 권리회복에 대한 연대의 취지로 2020년 1월 28일 청와대 앞에서 출범식⁶⁾을 가졌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 및 시민들 약 500여 명이 국가 범죄로 인해 박탈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공정한 문화예술계 확립을 촉구하기 위해 당사자로서 집단 민사소송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3. 블랙리스트, 그 ‘이후’ 너머의 ‘현재’를 향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공론화된 이후 사회에서, 다시금 블랙리스트 사태가 번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의 계원예대 총장 임명건 부터 대구와 광주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의 블랙리스트 사례까지. 누구 한 명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 성찰도 없이 그 이후의 시간이 흘러 현재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3) 「출판계“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철저히 해야”」, 『경향신문』, 2019.02.08.

4) 「5 문체부 내 건전콘텐츠활성화 TF등의 구성 및 운영사건」, 『(부록)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1_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기관별』, 2019.02. 356-363.

* 2014.10.~2016.12._문체부 기획조정실장 근무시절, 문체부 내 건전 콘텐츠 활성화TF 단장을 맡아 블랙리스트 관리·총괄 의혹

5) 박소현, ‘블랙리스트 이후의 문화정책 : 탈사실화의 문화정책을 경계하며’, ‘문화/과학’ 96호, 2018, 246-247.

6) 계원예대 블랙리스트 총장 퇴진을 위한 교수모임, 계원예대 블랙리스트 총장 퇴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예술대학생네트워크가 주요하게 연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및 시민사회 등의 단체 58개와 개인 544명이 연명.

이후는 이제 현재여야 한다. <블랙리스트 그 이후>라는 과거 시점의 현안을 이어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토론회와 같이 현재적 관점에서 블랙리스트 사태를 재조명해야 한다. 나아가 블랙리스트 사태의 나비효과로 인해 예상되는 미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환의 시대에서 현재 직면한 블랙리스트의 번짐에 대응하는 새로운 주체들에 주목해야 한다. 다양한 사회운동과 연대하는 흐름 안에서 새로운 주체들과의 협력의 가치를 구축하고 자율성과 급진성, 연대성을 지속해서 확장해야 한다.

블랙리스트 책임자 송수근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퇴진을 위한 공동행동

문재인 정부와 학교법인 계원학원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2차 가해를 중단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1조 2항)”

민주주의는 선거철에 투표하는 정치형식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질서를 구성하고 민주적 삶을 규정하는 공동체의 태도이자 가치이다.

과연 우리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은 ‘민주’라는 가치 표제를 달만한가?

나선형 DNA 구조를 밝혀낸 것으로 196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왓슨은 2007년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백인과 흑인이 동등한 지적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인종차별 발언으로, 그가 평생 몸담았던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로부터 총장직을 비롯해 명예 총장, 명예 석좌교수, 명예 이사직 등 그에게 부여되었던 모든 지위를 박탈당했다. 이후 공공과 민간, 영역을 불문하고 모든 과학 연구 프로젝트와 조직에서 거부당하고 과학계에서 퇴출당했다. 과학적 업적이 아무리 클지라도, 인간차별에 대해선 냉혹하리만치 엄중한 공동체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는 다만 문화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나아가 문화를 기반으로 구축된 우리 사회 공동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만든 원흉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적폐청산 목록의 선순위에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명시한 것이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것은 부당한 공권력을 동원한 체제 범죄이며, 예술가 이전에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자 국민의 지위를 침탈한 반헌법적 차별범죄이다.

이렇듯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을 조직적으로 짓밟은 국가범죄에 부역한 자가 성찰과 반성은 없이, 버젓이 예술대학의 총장으로 활보하는 2차 가해의 불온한 환경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예술인을 양성하는 기관의 총장에 예술인을 탄압하던 당사자가 임명된 현실은 참을 수 없는 비통함이다. 권력에 굴종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이 메시지에, 우리 예술인과 시민 사회는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꿈꿀 수 있단 말인가.

더욱 참혹한 것은 이에 대한 어떠한 공적 제재나 통제도 없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공화국의 민낯을 마주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파편화된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기관이라는 공공체계가 수동적이고 마치 죽어 있는 듯 '생각 없이' 모든 것을 안이하게 수용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일삼으며, 거대 악을 용인하고 방조하는 '악의 평범성'을 조장하는 현실에 맞닥뜨려 있다.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실행자인 송수근을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에서 퇴진시키는 것은 일개 개인에 대한 징벌 차원의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민주'공화국이라는 질서를 직조해내는 상징적인 사회적 실천이다.

이에 우리 예술인들은 부정의하고 부조리한 현 사태를 규탄하며 이를 바로잡고자, 범 시민사회 연대로 '블랙리스트 실행자 송수근 계원예대총장 퇴진 공동행동'을 구성하였다.

우리 '공동행동'이 시민사회에 고발하고 즉각 퇴진을 요구한 현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송수근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 사상, 평등, 결사, 출판, 표현의 자유와 문화향유권 등 모든 주권자의 권리를 짓밟은 헌정 유린의 국가범죄 실행자이다. 독재로 사상을 통제하고 전체주의 반공 국가 사회를 만들려 했던 일상의 파시즘에 부역한 자이다. 이런 이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예술인 교육의 시공간인 예술대학의 총장으로 어찌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2014년 10월부터,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사태가 발생한 2016년 하반기까지 문체부 내 실무 총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인물인 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실행의 대표적 인물 중 하나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그리고 <김기춘, 조운선 외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2심판결문>등을 통해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송수근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문화예술인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검열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감사원의 '문화체육관광부_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부당 지원배제(5.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 배제 지시 이행 총괄관리 TF 부당 운영)' 항목에서도 구체적으로 그의 블랙리스트 실행과정이 적시되어 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계원예술대학교 정관과 교육의 기본 이념으로 '홍익인간의 정신'을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그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 블랙리스트 실행자가 현재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인 것이다.

작년 9월 2일 총장취임에 앞서 1681명이 참여한 계원예술대학교 재학생 설문조사에서 1,668명이 현 총장 취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2019년 8월 송수근 총장 임명부터 9월 취임 그리고 현재까지 계원예술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현장의 예술인들은 여러 차례의 임명 철회 및 자진사퇴 요구를 밝혀왔다. 이에 송수근은 자신의 총장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오히려 교수와 교직원을 회유하여, 학생들을 고립시키고, 자신의 임기를 이어나가려는 야욕을 꾀꾸이 이어가고 있다.

학교법인 계원학원과 파라다이스재단에 다시 한 번 묻는다.

블랙리스트 실행자 송수근을 총장으로 계속 두는 것은 현재의 계원예술대학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래의 계원예술대학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파렴치한 짓이다. 이미 학교 존립의 기본 축인 학생들의 신뢰를 잃은 총장이 어떤 리더쉽으로 미래의 계원예술대학교를 담보할 수 있겠는가! 예술인의 기본권을 말살한 블랙리스트 실행자를 총장으로 둔 예술교육장에서 어떤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송수근 사태와 관련하여 계원예대 학생 비상대책위를 비롯하여 현장 예술인들은 작년 9월 30일, 대학 총장 최종 승인의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교육부에 책임과 후속을 묻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계원예대 학생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거리로 나서며, 국가 교육정책 주무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성찰과 후속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후속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유은혜 현 교육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당시, 그는 “예술을 억압하고 예술인들을 배제하며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는 블랙리스트의 흔적들을 말끔히 지워야만 문화예술기관의 혁신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과연 그 발언의 진정성은 어디를 향한 것인지 묻고 싶다.

현 정부는 부정의를 바로잡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한 촛불혁명의 시대적 책무를 안고 탄생하였다. 블랙리스트 진상 보고서의 잉크도 마르지 않는 지금, 대한민국 교육부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여되는 대학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 시민으로서의 예술인의 기본권을 말살한 블랙리스트 범죄 실행자를 보란 듯이 예술대학의 총장으로 활보하게끔 방치하고 있다. 이는, 반헌법적 체제범죄인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2차 가해와 재발의 씨앗을 본 정부가 심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1월 8일 '2020 문화예술인 신년인사·음악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다시는 블랙리스트 사태는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과 창작을 지원하고 복지 수준도 최대한 보장하겠다.”라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최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것이기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기관은 이를 지킬 당연 책무가 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과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발언은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인가,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블랙리스트사태는 문체부에 한정된 과거의 사안으로 치부할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문체부 블랙리스트가 아닌 청와대 블랙리스트이며, 청와대부터 각 정부 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조직적으로 자행된 국가범죄다. 블랙리스트 실행자들이 문화예술계 곳곳(학교, 기관 등)에 복귀하여 보란 듯이 블랙리스트국가범죄의 2차 가해가 벌어지는 현 상황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점 엄중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예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그 발언이 최소한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뜻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실행자를 예술대학 총장으로 임명하고 승인한 학교법인 계원학원과 대한민국 교육부, 그리고 청와대에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 하나, 학교법인 계원학원은 송수근 총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 하나, 블랙리스트 총장 임명을 승인한 대한민국 교육부는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 하나, 청와대는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복귀하여,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2차 가해가 벌어지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구하라!

침묵과 꺾시와 요식행위의 시대가 이어진다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복종할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 이 사회 요직에서 호가호위하는 블랙리스트 범죄자들의 퇴출과 진정한 표현의 자유가 이뤄지는 그 날까지 단결 투쟁이다.

2020년 1월 28일

<블랙리스트 실행자 송수근 계원예대총장 퇴진 공동행동>

연대<단체 58개>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학생회, (사)서울민예총, (사)시민자치문화센터, (사)인디053,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사)한국민족예술총연합 공주시 지부, (사)한국민족총협회, 계원예대 블랙리스트총장퇴진과 학교정상화를 위한 교수모임, 계원예대 블랙리스트 총장 비상대책위, 계원예술대학교 총학생회,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교육·문화연구local+, 극단 고래, 극단 서울괴담, 노동당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당원협의회,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댄스씨어터 틱, 무브먼트 당당, 무용인 희망연대 오롯,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문화인천네트워크, 뮤지션유니온, 민예총,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 비평그룹 시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대학 건설준비위원회, 서울여자대학교 아트앤디자인스쿨 학생회, 서울연극협회, 수원민예총,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학생회, 아시아일인극협회, 연극연구소 명랑거울,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학생회,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우리만화연대, 이미지연구공동체 반짝,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학생회, 자유한국당 규탄 시민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창작극단 아나그라마, 충남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학생회, 콜렉티브 텅굴, 페미니스트극작가모임 호랑이기운,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프로젝트 통, 한국예술종합학교 2019 애니과 학생회,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학생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학생회, 한국예술종합학교비정규직지부, 한성대학교 인문예술대학 회화과 학생회, 흥에門문화연구소, 흥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생회, Logical Revolts, UCLA 미술 대학원

연대<개인 544명>

강기영, 강나경, 강문식(그래픽디자이너), 강민서, 강민주, 강민지(창작자), 강민호, 강석우, 강소연, 강수경(예술가), 강수영(계원예대), 강예원, 강원정, 강윤지(전시/공연 기획), 강은교, 강지수(마임), 강혁, 강현아(대학생), 이채언(건축디자인과), 고경표, 고나은(계원예대 졸업생), 고명진, 고부응, 고서영, 고안철, 공하성(배우), 곽진경, 구민희, 구봄, 권기환(회사원), 권석린, 권수민(돌꽃이포럼), 권연순(연극), 권은채, 권태현, 권효진(계원예대 학생), 김가을, 김고운, 김광수(문화활동가), 김규원, 김규원(문화정책연구), 김규향, 김나빈, 김나영, 김남윤, 김다빈, 김다빈(디자이너), 김다운(학생), 김다현, 김도연, 김도희, 김동은, 김동은, 김리안, 김망고, 김미도(연극평론), 김민정, 김민철, 김민희, 김보경, 김보성, 김보영, 김봉건(배우), 김봉석(연극), 김분홍(예술/디자이너), 김사랑, 김상철(문화정책), 김상화(영화), 김석현, 김성환(배우), 김성환(연극), 김세리, 김소연(연극평론), 김소영, 김수민(학생), 김수억, 김수영, 김수현, 김시연, 김연우, 김영, 김예령, 김예령, 김예슬, 김예원(계원예술대학교), 김예은, 김옥련(무용가), 김용택(문화예술교육가), 김유리, 김유진(문화기획자), 김윤규(무용), 김은지(미술), 김이태(시각예술가), 김인선, 김일규, 김일수(전기수리), 김장전(협동조합컨설턴트), 김재상(문화운동), 김정수, 김정현, 김제희, 김종범, 김주영, 김주원, 김지나, 김지선, 김지수, 김지영, 김지현, 김지혜(음악가), 김지희(문화예술), 김진만, 김진배, 김진희, 김찬혁, 김창길(문화기획), 김채원, 김채정, 김채현, 김태용, 김태휘, 김하늘, 김하은, 김해인, 김현아, 김현우, 김현희, 김혜민(장애인인권), 김혜인(학생), 김혜정, 김효정, 김희연, 나희덕, 남금종, 남민경, 남수민, 남재은, 남정숙, 남지수(연극평론가), 남하늘, 노유래, 노한슬, 노현강, 노현우(배우), 노현주, 노현지, 도효민, 류연수, 류용운, 류지남, 류형수, 마민지(영화), 맹준규(연구자), 모승덕, 문기훈(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문인해, 민동인, 민병창, 박기효, 박다솜, 박민아, 박보령, 박선희, 박성호, 박세진, 박수연, 박수현, 박시은, 박신영, 박신욱, 박여진, 박영일, 박용희(공연예술), 박유림(졸업생), 박유빈, 박유진, 박이현, 박재민, 박주은, 박주현, 박준석(배우), 박준식, 박지수, 박지은, 박지혜, 박지혜, 박진희, 박찬국(시각예술가), 박창우, 박채연, 박철우, 박하연, 박한빈, 박혜원, 박홍열, 박효범, 박효준, 방선일, 방주원, 방준석(음악인), 배나영, 배서현(학생), 배선영(작가), 배수현, 배진만(배우), 배진희, 백상엽, 백선주(학생), 백송이, 백송현(대학생), 백재원, 백인태, 백재원, 백지연, 백현진(예술가), 변우균(예술교육노동), 변원향, 부새롬(연극), 서동진(계원예대), 서보형, 서성일, 서정대(예술행정), 서제인, 서지영(연극), 선옥현(극작가), 성기완(인디뮤지션), 성기우, 성기웅(연극), 성기현, 성윤하, 성의정, 성지수(다원예술), 성채현, 손경호, 손민경, 손하현, 손혜주, 손희지, 송기영(제작자), 송령경, 송민정, 송예림, 송유경, 송지호, 송현우(성악가), 송혜린, 신나예, 신민준, 신보경, 신성환, 신예건, 신유림, 신현준(음악평론가), 신현지, 신호람, 심보선(문학/사회학), 심세은, 심유선(한예종 영상원 학생회), 심재중(대학강사), 심재형, 심희정(연극), 안병호(영화), 안보영, 안석희, 안세열, 안소은, 안영정, 안예슬, 안유하, 안이호(판소리 소리꾼), 안재은, 안정민(영화), 안제경, 안준형(미술작가), 안지형, 안지환(영화), 안태호, 양나래, 양승우, 양진호(철학자), 양혜규, 엄서현, 엄소현, 엄지은(시각예술), 여예진(학생), 연수지, 연한슬, 염신규(문화연구자), 오다운(학생), 오선아(배우), 오세아, 오세연, 오승민, 오유진(당원), 오은영, 오은정, 온달(연극/디자이너), 우희서, 원승환, 원영현, 원정아, 위대현, 위효정(연구자), 유영민(학생), 유민형(한국고전문학), 유승민(연구자), 유아연, 유영대, 유예진, 유은비, 유지영(무용), 유채연, 유한나, 유한짐(건축미술), 유희숙, 윤가현(연극), 윤나리, 윤수희, 윤은경, 윤자영, 윤종필(문화기획자), 윤지수, 윤채영, 윤태경(국악), 윤해경, 윤형신, 이가람, 이경민, 이규석, 이근선(노동당), 이다운, 이도경, 이동민(문화기획자), 이동호, 이명서, 이민, 이민성(작가), 이민아, 이민주(미술), 이병기(영화), 이상근, 이상길(영

화), 이상민(문화기획), 이상욱, 이서인, 이성민, 이성훈(회사원), 이소영, 이송은, 이수연, 이수연, 이수정(영화), 이수진, 이승연, 이승현, 이시온(홍익대학교 미대의 외침), 이썬(싱어송라이터), 이안(영화), 이애경(연극), 이여진, 이연지(만화,웹툰), 이영수, 이예영(미술대학생), 이예진, 이오연, 이오진(극작가), 이용배(계원예대 블랙리스트총장퇴진과 학교정상화를 위한 교수모임), 이원빈, 이원재(문화운동가), 이유경, 이유정(계원예술대학교 광고브랜드디자인과 학생), 이유지아(작가), 이윤수(예술가), 이윤이(영화), 이윤정, 이윤정(예술가), 이은정(작가), 이이난(미술), 이인호(건축가), 이전수(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이정수, 이정엽(미디어문화연구), 이정윤, 이정진, 이정훈, 이종승(연극), 이종찬, 이종현(공연예술), 이주민, 이주영, 이주현, 이준향, 이지은, 이지은(학부생), 이지혜, 이진숙, 이진형(음악), 이창원(문화기획), 이장춘, 이채리, 이충복, 이태욱(연극), 이태화(연구자), 이하늘, 이한나, 이해성, 이해성(학생), 이현나, 이현수, 이형주, 이해인(이화여대 학부생), 이화영, 이효립(사회참여연극연출가), 이희경(음악), 이희단, 이희진, 임민욱, 임소리, 임시은, 임예술, 임인자, 임재욱, 임정자(동화작가), 임정혁(연출가), 임지우, 임채은, 임하정, 임형섭, 임효진, 임희윤, 장광섭, 장규리, 장병호, 장세형, 장순향, 장엄지, 장영구, 장영민, 장혜령(문화기획), 적야(시각예술), 전광표, 전규진, 전두석(연구자), 전소연, 전소영, 전수빈, 전영우, 전현덕(졸업생), 전해정, 전효관, 정강산(독립연구자), 정근영, 정기황(도시건축), 정다운(그래픽디자인), 정대용(연극), 정문식, 정민숙, 정서연(계원예대), 정연탁(문학), 정원욱(연구자), 정유림, 정유진, 정윤희(작가), 정은빈, 정재은(동화), 정지우, 정지윤, 정하나, 정한나, 정혜음, 정호기, 조민수, 조민제, 조승재(성공회대), 조승호, 조영상, 조용, 조유빈, 조은영, 조은주, 조장은(연구자), 조정구(창작자), 조태상(음악가), 조한별, 조한별(한예종), 조한새임, 조현철, 주준모, 주현욱(졸업생), 지봉규, 지수민, 지윤, 차승용(문화기획), 차윤교, 차혜림, 천제구, 채민(예술인), 차주향, 천주희, 최두원, 최선덕, 최세윤, 최승연, 최승훈(문화산업정책), 최영민, 최영은, 최예지, 최예진(계원예대), 최우석, 최우주, 최유경, 최유진, 최윤희, 최윤희(학생), 최재정, 최정현, 최지현(학생), 최현수, 하상현, 하연화, 하유경, 한고은, 한대수, 한솔빈, 한수정, 한인경, 한재연, 한준희, 한징수, 한창섭, 한혜수, 함상희, 허정인, 허호, 현가비, 현린(사진), 현유정, 홍가예, 홍기원, 홍선희, 홍은지(공연예술연출), 흥태림(미술비평), 황수연, 황혜명, ISHIKAWA JURI(연극), Lee jeoung eun